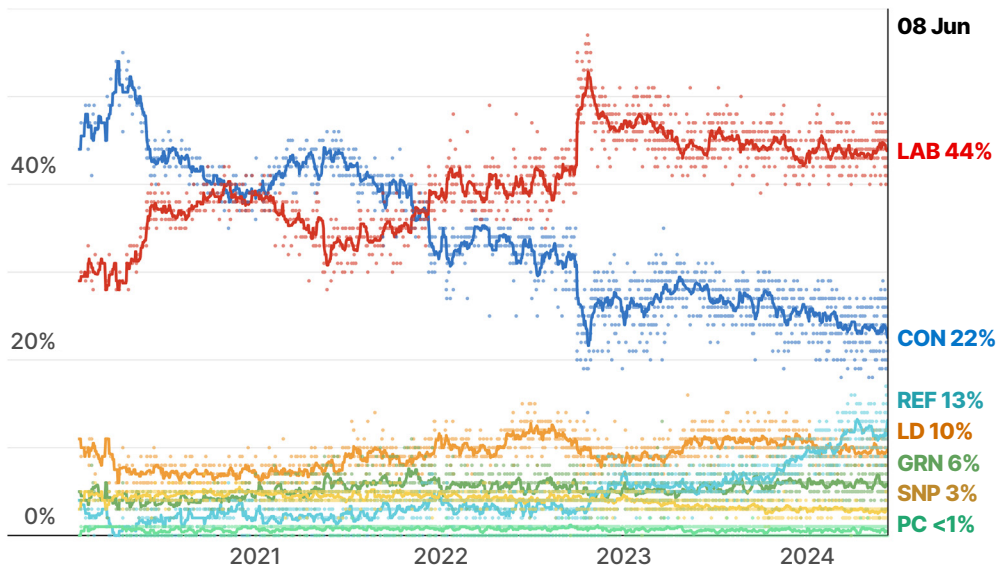


7월 영국 조기총선이 가져올 변화와 한국의 기회는?

“집권하고는 있지만, 권력은 없다”(In Office but Not in Power). 영국 언론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처한 현재 상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말이다. '16년 브렉시트(Brexit) 결정 이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상황과 코로나19, 러-우 전쟁 이후 이어진 물가의 기록적 상승 등으로 현재 보수당 정부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24%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45% 수준의 노동당 지지율에 비해 20%p 이상 격차가 벌어진 상태이다.

영국 정당별 지지율 현황



자료 : BBC(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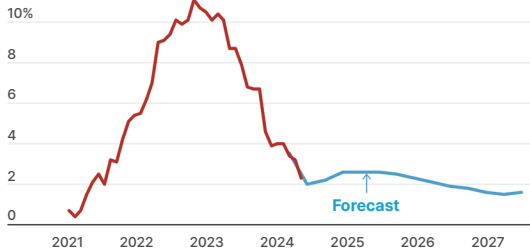
보수당의 낮은 지지율은 최근 몇 년 간 리더십이 보인 불안정한 모습에도 기인한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사임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을 포함하면 8년 동안 무려 5명의 총리가 영국 보수당을 이끌었다. 평균 임기가 1.6년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불법 파티를 열어 물의를 일으킨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높은 물가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발표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켜 취임 45일만에 사퇴한 '최단명 총리' 리즈 트러스(Liz Truss)에 이르기까지 보수당 리더십에 대한 영국 국민의 신뢰는 크게 추락했다.

영국 국민의 민심이 노동당으로 크게 돌아섰다는 징조는 지난 5월 4일 치러진 지방 선거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런던에서는 노동당 소속의 사디크 칸(Sadiq Khan) 시장이 런던시장으로는 최초로 3연임에 성공했다. 시의원 선거에서도 보수당을 지지했던 지역들이 대거 노동당으로 이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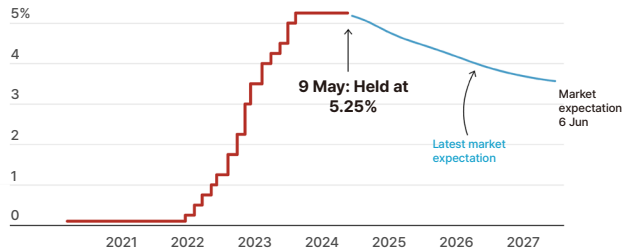
이처럼 수낙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정부가 영국 역사상 가장 무기력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2일 수낙 총리는 다우닝가 총리 관저 야외 기자회견장에서 7월 4일에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는 깜짝 발표를 하였다. 총선 일자가 국회의원 임기에 맞추어 정해진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에서는 총리가 직전 선거가 있는 지 5년 이내에 언제든지 선거 일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수낙 총리는 2025년 1월까지 자신의 결정을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수낙은 그 날짜를 약 6개월 앞당겼다. 그렇다면 왜 보수당의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낙 총리는 조기총선 카드를 감행하는 것일까?

그것은 영국 경제가 약간이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는 올 여름이 그나마 보수당이 의석 수를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적기라는 총리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IMF에 따르면 한때 10%를 상회했던 영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올해 3월 전년 동기대비 3.2%로 떨어졌고, 4월에는 2.3%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경제성장 전망치도 0.5%에서 최근 0.7%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다. 물가 상승이 2% 대로 안정화된다면 현재 5.25% 수준인 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총리가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열리는 유럽 축구 챔피언십(유로 2024) 효과도 고려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만큼 영국 보수당은 사면초가에 몰린 모양새다.

영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전망



영국 금리 현황과 전망



자료: The Spectator(2024)

하지만 영국의 경기 회복 전망도, 유로 2024의 열기도 보수당을 선거에서 구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영국에서는 올 7월 선거를 기점으로 14년 만에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역사적인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총 650석 중 노동당 452석, 보수당이 80석을 차지해 노동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된다.

노동당이 승리하면 현 노동당 당수 키어 스타머(Kier Starmer)가 총리에 오를 전망이다. 강경한 유럽 회의론자이자 분리론자였던 수낙과는 달리 스타머는 EU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록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브렉시트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때마침 영국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 of Commerce)도 브렉시트로 인해 기업활동 원가가 크게 증가했다며, 스타머가 당선 되면 EU와의 무역협정(UK-EU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TCA)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스타머는 EU 재가입에는 선을 그으며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있다. 그는 “브렉시트는 이미 굳어졌으며(settled), EU와는 광범위한 범위(huge scope)에서 보다 ‘공식적 협력관계’(formal means of cooperation)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식적 협력관계’란 영국이 매월 개최되는 EU 외교이사회(Foreign Affairs Council, FAC)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영국-EU간 ‘안보협약’(security pact)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노동당의 스타머와 그의 내각은 소위 ‘진보적 실용주의’(Progressive Realism)라는 기조 아래 인권, 환경,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전통적 진보의 가치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EU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EU와 주로 관세 등 경제적 문제에만 국한해서 논의했던 보리스 존슨 등 영국 보수당과는 차별화된 행보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노동당은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공적투자를 강조한 만큼, 그간 보수당 정부에서 사실상 시장에 방치했던 NHS, 공교육, 육아 등 보건 및 교육 분야에도 많은 투자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영국 노동당은 집권 후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국방강화(3대 국정과제 : 경제안정, 국방강화, 국경통제)를 내세우고 있어 향후 방산 분야에서 한-영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한-영은 작년 말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민 방문으로 양국 관계

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방산 분야에서 공동수출 및 방위력 개선 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노동당 집권 시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에너지 및 기후 안보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국 노동당은 '에너지 독립'을 위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 55GW, 육상풍력 35GW, 태양광 50GW 개발 및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 개발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해저케이블, 해상풍력 구조물 등 전력 기자재 관련 기업들의 영국 진출 활성화, 그리고 원자력 기기 수출 및 원전수주 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단, 방산 및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영국 시장 진출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 강화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 확대와 양국 정부 간 G2G 협력 플랫폼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개선협상이 진행 중인 한-영 FTA는 양국 정부 간 G2G협력 플랫폼 활성화의 핵심적 인프라로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한-영 FTA는 디지털, 공급망, 청정 에너지, 바이오,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의 신통상규범을 논의하는 만큼, 앞으로 한-영 FTA를 통해 한국과 영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자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나누는 협력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경제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 및 인적교류(학생 및 교수 교환 프로그램 등) 사업 확대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함께 가동한다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영국은 한국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